

<2022 국회 9급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

1.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②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 ⑤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지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해설>

①, ③ (X)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② (X)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 ④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⑤ (X)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답: ④

2. 다음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성과·만족이론 - 포터와 롤러(Porter and Lawler)
- ② 동기위생이론론 - 허즈버그(Herzberg)
- ③ ERG이론 - 앨더퍼(Alderfer)
- ④ 성취동기이론 - 맥클리랜드(McClelland)
- ⑤ 욕구계층이론 - 매슬로우(Maslow)

<해설>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이고, 나머지는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론입니다.

답: ①

3.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와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실적주의 - 정치적 중립성
- ㄴ. 대표관료제 - 사회적 형평성 제고
- ㄷ. 엽관주의 - 행정논리
- ㄹ. 대표관료제 - 효율성 강화
- ㅁ.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
- ㅂ. 엽관주의 - 국민 대응성 약화

- ① ㄱ, ㄴ ② ㄱ, ㅂ ③ ㄴ, ㄷ ④ ㄹ, ㅂ ⑤ ㅁ, ㅂ

<해설>

- ㄱ. (O)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 ㄴ. (O)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을 제고합니다.
- ㄷ. (X) 엽관주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정치논리).
- ㄹ. (X)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능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ㅁ. (X)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일관성·계속성 유지에 기여합니다(행정논리).
- ㅂ. (X) 엽관주의는 관료들의 정치적 대응성(요구에 부응함)을 높입니다.

답: ①

4.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훈련 수요 파악 및 근무성적평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② 직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전문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므로 분화된 산업사회에 적합하다.
- ④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통해 조직 및 직무환경의 변화 대응에 용이하다.
- ⑤ 동일직무·동일보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여 보수의 형평성이 높다.

<해설>

- ①, ② (O)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이나 성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냄 → 근무성적평정 기준 확립, 담당 직원의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 유리
- ③ (O) 하나의 직무에 장기간 근무 → 전문직업인 양성에 도움 →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 ④ (X) 직무가 변화하면 새로 분석해야 함 → 조직이나 직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직무의 부과 등 직무변화에 신속한 대응 어려움(인사관리의 경직성)
- ⑤ (O)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 → 공평한 보수체계 확립

답: ④

5. 성과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한다.
- ②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③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조직 공정성을 제고한다.
- ④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 ⑤ 고정적이고 엄격한 서열화로 인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

<풀이의 핵심>

※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비교

구분	연공주의	성과주의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및 신입사원 채용 중심 • 일반적인 선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및 경력사원 채용 강화 • 전문성과 창의성 중심의 선발 기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도와 근속연수 중심의 평가 • 모호하고 불투명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 •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과 연차 중심의 연공 승진 • 연공형 월급제, 고정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 파괴 및 성과, 역량에 의한 승진 • 연봉제, 성과급제 등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퇴직 • 전직 지원 활성화

<해설>

- ② (X) 성과주의는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⑤ (O) 성과주의는 형식보다는 실적과 성과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유연한 임용 방식을 확대합니다.

답: ②

6. 공직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패의 접근법 중 체제론적 접근법은 복합적 요인보다 하나의 변수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② 백색부패는 흑색부패와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가 아니다.
- ③ 권력형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부패행위이다.
- ④ 거래형부패는 뇌물을 주고받아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특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이다.
- ⑤ 비거래형부패는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해설>

- ① (X)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입니다(하나의 변수 X).

답: ①

7.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의 대상이다.
 - ②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 ③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 ④ 집행절차 측면에서 예산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하여, 기금의 경우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 ⑤ 기금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운용평가 등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해설>

- ① (O) 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 대상입니다.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X) 통합예산에 금융성 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금 중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제외합니다.
- ③ (O) 「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④ (O)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30%의 범위 안에서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해 집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의 경우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 ⑤ (O)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답: ②

8. 다음 행정의 가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정의
- ② 평등
- ③ 공익
- ④ 자유
- ⑤ 합법성

<해설>

합법성은 수단적 가치이고, 나머지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답: ⑤

9.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예산이다.
-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데, 계속비도 이에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상 계속비가 인정된다.
- ④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R&D 사업 등이 단년도 예산주의의 예외가 된다.
- ⑤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해설>

- ② (O) 헌법 제 54조

「헌법」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③ (O)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④ (O) 계속비는 한정성의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 ⑤ (X)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이 불가 X).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답: ⑤

10.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적평가(계량평가)는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② 질적평가(비계량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③ 진실형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 ④ 준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한다.
 - ⑤ 비실험적 평가에서는 주로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와 인과 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활용된다.

<해설>

- ① (O) 양적평가는 정책집행 결과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 ② (O) 질적평가는 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 수치화하여 측정이 어려운 사업 결과 내지는 산출물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됩니다. 이 평가 방법은 그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O), ④ (X) 진실형 평가는 실험집단(정책실시 집단)과 통제 집단(실시하지 않는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하는 실험으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준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처리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실험으로 무작위 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합니다.
- ⑤ (O) 비실험적 평가의 방법으로 통계적 통제(시계열분석, 회귀분석), 인과모형에 의한 추론 등이 있습니다.

답: ④

11.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기술 및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 ②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 ③ 첨단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행정의 혁신이 중앙집권적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참여나 행정의 대응성은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 ④ 이른바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민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 ⑤ 우리나라 전자정부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 ① (O) 「전자정부법」 제2조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③ (X) 전자정부는 정부의 투명성·접근성·대응성이 높여 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 ④ (O)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모형으로 FAST(Flatter, Agile, Streamlined, Tech-savvy) 정부를 제시하였습니다(Flatter: 수평, Agile: 신속, Streamlined: 간소, Tech-savvy: 기술응용).
- ⑤ (O) 「정부조직법」 제34조

「전자정부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답: ③

12.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 지방 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지역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지방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대등한 협조체제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해설>

② (X) 지방 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중앙집권의 장점입니다.

답: ②

1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⑤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100조

「지방자치법」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O) 「지방자치법」 제73조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X)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O) 「지방자치법」 제72조

「지방자치법」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議)한다.

⑤ (O) 「지방자치법」 제73조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 ③

1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 ② 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 ③ 주민감사를 청구한 개인은 누구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민의 이익보다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 ② (X)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 ③ (O) 재무행위와 관련한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X) 「지방자치법」 제22조 제6항
- ⑤ (X)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항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답: ③

15.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 ②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서 지방세의 세수확장에 한계가 있다.
- ③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운영된다.
- ④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 ⑤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로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 ② (X) 재산과세(재산세, 취득세 등)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의 신장성이 약합니다(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이 높음 X).
- ③ (O)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둡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 ⑤ (O) 「지방재정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답: ②

16.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직접성
- ② 강제성
- ③ 효과성
- ④ 가시성
- ⑤ 자동성

<풀이의 핵심>

※ 정책수단의 분류

강제성	행정수단이 규제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민간의 임의적인 판단에 달려있는지를 기준으로 함
직접성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정부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른 기준
자동성	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기준 ②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경우(바우처 등) 새롭게 기구나 조직을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성이 높음
가시성 (투명성)	① 정책도구와 관련된 정책 과정이 가시적인지 여부와 관련된 기준 ② 보조금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로서 가시성이 높지만, 규제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이 쉽게 파악이 되지 않아 가시성이 낮음

<해설>

효과성은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 ③

17.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도 포함시키고 있다.
- ② 신제도주의는 이미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보다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 ③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제도가 사람의 행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 ④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 ⑤ 신제도주의는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또는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연구한다.

<해설>

- ① (O)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공식적 법령과 기구 외에 비공식적 규범을 포함합니다.
- ② (X)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적·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강한 지속성을 지닙니다(제도의 안정성).
- ③ (O) 행태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를 통해 행정현상을 설명하였으며 법이나 제도는 이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 정도로 이해하였으나,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행태론에 반발하며 사회의 제 현상(정치·경제·사회·행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도를 사람과 대등한 위치의 독립변수 내지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독립변수로 고려합니다.
- ④ (O) 제도가 개인을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할 수도 있어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 ⑤ (O)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합니다.

※ 외생변수: 시스템 바깥의 독립변수(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수

※ 내생변수: 분석모형에서 미지수인 변수

답: ②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로써 사업의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 ②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에서는 주어진 자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 ③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에서는 하향식 예산과정을 통해 자원배분 권한의 집권화가 강화된다.
- ④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의 핵심은 부서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 ⑤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 System)는 계획예산제도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이 중시된다.

<해설>

- ⑤ (X) 영기준예산제도는 단기적 사업관점이고,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관점입니다.

답: ⑤

19.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분배정책 - 연구개발 사업지원
- ② 규제정책 -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 ③ 배분정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④ 구성정책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⑤ 상징정책 - 국기 게양 행사

<해설>

- ① (X) 연구개발 사업지원 →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분배)하는 내용을 지님 → 분배정책
- ④ (O) 공무원 연금제도 → 주로 정부기구의 조정과 관련 → 구성정책

답: ①

20.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소비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 ② 점증모형은 합리모형과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③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혼합모형에서 나타난다.
- ④ 쓰레기통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다.
- ⑤ 최적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에서 출발한다.

<해설>

- ② (O) 점증모형은 정책 실상의 일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여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입니다.
- ③ (O) 합리모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점증모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토대로 두 이론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모형이 시도되었습니다.
- ④ (O) 쓰레기통 모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 ⑤ (X) Dror도 에치오니와 마찬가지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양자에 모두 불신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으로서 최적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점증모형의 정치적 합리성과 합리모형의 경제적 합리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합리적 요소 외에 주관, 직관, 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인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최적'이 되려면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답: ⑤